

# ‘침수지역 하수관 연결’ 주민·지자체 갈등 심화

서구, 사업 수리계획 검토서 타당성 확보 못 해  
대책위, 호우피해 반복 우려... “횡단 공사 필요”

여름철 상습 침수지역인 광주 서석교 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를 놓고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상무대로(왕복 8차선로)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 않을 경우 침수피해가 반복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구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해 추가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며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6일 서구와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화정동과 농성동은 남구 방림동과 진월동, 백운동 일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광주천으로 빠져나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이견 조정을 위해 5차례의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사의 범위와 시행구간을 선정, 지난해 10월부터 10억원 예산을 투입해 농성동 ‘수 플라워(군분로 221)에서 상무대로 군분교각’까지 직경 1,200mm의 신설관로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책위와 수차례 서면

합의했던 상무대로 건너편 강문외과 인근의 1,800mm 하수관 연결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서구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뒤 하수관 연결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열린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리계획 검토 결과에서 하수관 연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상무대로 횡단 공사를 추가로 진행할 경우 8억 원의 예산이 더 사용되지만 통수기능은 초당 1.2t으로 큰 효과가 없고 인근 지역 침수 또한 우려된다”며 “또, 현재 설치 중인 1,200mm 신설관은 단기적인 대책일뿐 저지대인 서석교 일대 침수 예방에는 남구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줄이는 방식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군분교까지지만 하는 공사는 침수피해 예방에 있어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석교 인근에 매립돼 있는 3월 하수관의 좁게 매설된 일부 구간이 물이 흐르지 못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새로운 하수관로를 저류시설로 사

용한다면 역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무대로를 횡단 후 강문외과 앞 군분2로로 이어지는 하수관부터는 경사가 형성돼 있어 침수대책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민 대책위 대표는 “근본적인 침

수문제 해결을 위해 상무대로 횡단 공사는 꼭 필요하다”며 “서구는 마치 군분2로 저지대에 위치한 신세계·이마트 등 재벌기업들을 의식하고 침수를 막기 위해 이곳을 저수지로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리계획 검토 결과 예산과 공사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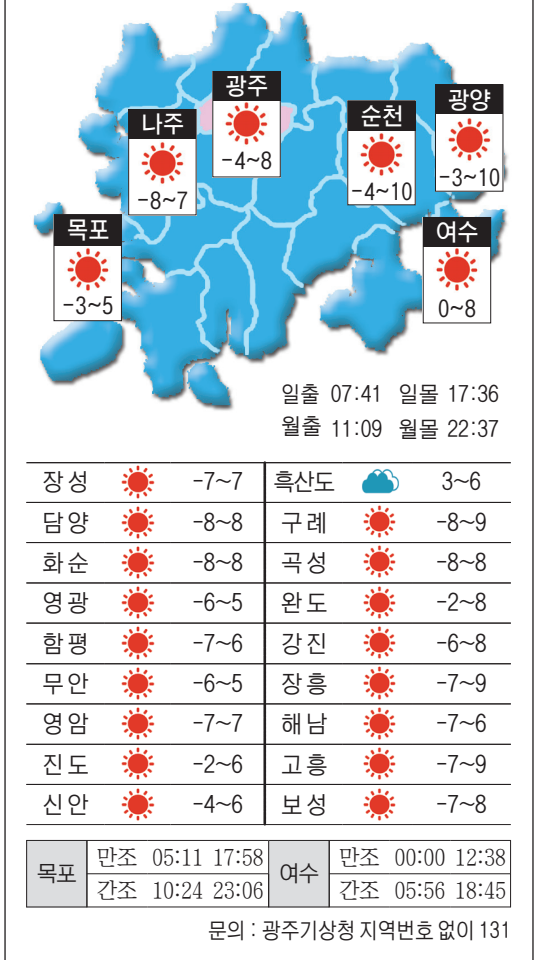
해 발생할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수할 정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천 방류량 대비 절반 정도의 유량이 남구에서 서석교 인근으로 흘러가는 것을 파악했고 광주시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세워 근본적인 침수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 어벤져스 봉사단 김치 나눔

6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 어벤져스 봉사단이 용기단지 수임금 등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오늘의 날씨



## 영산강유역환경청, 물관리 일원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익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영산강·섬진강·광주천 등 10개 국하천(476km) 업무를 이관받았다고 6일 밝혔다.

환경청이 이관받은 10개 하천은 ▲영산강 ▲섬진강 ▲탄진강 ▲광주천 ▲황동강 ▲함평천 ▲지석천 ▲고막원천 ▲오천 ▲보성강 등이다.

하천 관리 업무는 유지·관리, 하천정비 사업,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등이다. 환경청은 하천국을 하천계획과·하천공사과·하천관리1과·하천관리2과 등 4개 부서로 구성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수질을 관리하고 수량을 확보해 안전한 물관리와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 ‘반쪽 5·18보상법’ 법조항 오류로 무용지물

2015년 기준 조항 그대로...해직 기자 등 심의 기회 박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신청 기간을 수정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6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따르면 5·18 관련자에 해직 기자와 성폭력 피해자,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당초 5·18 관련자는 사망자 유족이나 다친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지난해 6월 보상법을 개정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5·18 관련자는 보상금이나 생활지원

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5·18 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법 조항의 오류로 이러한 심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점이다.

현행 5·18 보상법에는 보상 신청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아놓은 기존의 조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마지막 5·18 보상 신청이 이뤄진 2015년 법 조항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수정·삭제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해직 기자와 학사 징계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5·18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신청 기간을 바로 잡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다시 발의했지만 6개월 가까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회가 맡은 소임을 다 하지 않다보니 진작 시행됐어야 할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18기념재단은 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특수학교 장애인 폭행 의혹 수사 집중

경찰, 가해자 동료들 소환 참고인 조사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 뇌병변 장애인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6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애인 폭행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구 소재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뇌 병변 1급 장애인 남성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 등은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고통을 호소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를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며 폭행하고, 수건으로 목을 감아 올리는 이른바 ‘교수형 놀이’를 하는 등 폭행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피해 사실 진술 능력이 전혀 없는 데에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내에 CCTV 등도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소환해 진술을 청취했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A씨가 행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준 기자

## 광주·전남 임금체불 권리구제율 상승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권리구제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진정·고소·고발은 모두 2만 8,434건으로 75.4%인 2만 1,438건이 구제됐다.

지난해보다 6.0%p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청이 신고를 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만 7,112건(79.8%)이 해결됐다.

기업체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대지급)하거나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4,326건(20.2%)으로 집계됐다. /홍승현 기자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캐노피 1만원)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